1. 총평

2021년 국회직 8급 행정학 개념 및 이론 문제가 15문제, 법령 문제가 10문제로 2020년 국회직 8급 문제에 비해 법령 문제의 출제 빈도가 낮아졌으나 법령 문제의 출제 빈도가 전체적으로는 높은 편이다(법령 문제가 국회직의 경우 평균 6~8문제 정도임, 2020년에는 15문제임).

문제의 난이도를 보면,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1문제(행정학적 관점에서는 '상'에 해당하나,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중'에 해당),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4문제'로서 2020년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출제되었다. 그러나 행정학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단순하게 반복암기식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매우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 정도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84점 이상은 우수(개인적으로 88점 이상 원함), 80점에서 76점까지는 보통, 72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알파행정학으로 공부했던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84점 이상 맞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총론(기초이론)	5	개념문제	1
정책학	4	이론문제	11
조직이론	4	법령문제	10
인사행정론	2	학자문제	-
재무행정론	5	사례문제	3
지방자치론	4		
행정환류론 (전자정부론포함)	1		

(1)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인사행정론이 적게 출제되었고, 재무행정론이 많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다음 시험을 위해서라면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개념, 이론, 사례문제를 합친 이론 문제가 15문제, 법령 문제가 10문제이다. 국회직은 평균적으로 법령 문제의 출제빈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국가직이나 지방직의 경우 법령 문제가 25%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3. 문제의 난이도 및 문항 분석

상(1)	중상(4)	중(15)	중하(5)
18.	7,10,21,23.	2,3,4,5,6,8,9,11,12,16,17,19,20,22,24.	1,13,14,15,25.

(1) 7번 문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심의위원회로 바꾸어 출제한 문제이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 해당 지문만 보면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다른 지문을 보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본다.

(2) 10번 문제 : 암기가 부족한 수험생의 경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가전공항지석유광수력발전랜드, 철수주도광고조석마감, 농무관안전건강도연구소비 등). 특히 국립의료원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책임운영기관이었으나, 2010년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바뀌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출제함에 따라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3) 18번 문제 :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을 묻는 문제로서, 행정학 문제라기보다는 법학 문제로 볼 수도 있다. 행정학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으나 법학(헌법)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4) 21번 문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출제된 지문으로 ②번 지문 자체는 어려웠으나, 나머지 지문이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한 수험생이라면 풀 수 있었을 것이다.

(5) 23번 문제 :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에서 개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없으며 제도에 종속될 뿐이라고 본다.'라는 지문이 어려웠다고 본다. 2019년 알파행정학 예상문제집에 똑같은 지문이 있다. 너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아 2020년 알파행정학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삭제했는데 출제된 지문이다.

4. 당부 사항

1) 상당 수의 문제들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1. 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국회\8급

① 견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는 효력을 가진다.
②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액의 2/3를 감한다.
③ 강등은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해임은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3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⑤ 파면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해설] ②(X). ②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액의 1/3을 감한다.

중징계	파 면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감액되며(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0%, 5년 미만인 경우 25% 감액), 퇴직수당은 50% 감액된다.
	해 임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임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급여·퇴직수당이 감액되지는 않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가 감액(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5%, 5년 미만인 경우 12.5% 감액)되며, 퇴직수당은 25% 감액된다.
	강 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다만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 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경징계	감 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 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①(O).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단 부정부패,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등에 따른 징계처분은 각각 6개월 가산)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정답] ②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576-577.

2.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국회8급

① 교부세의 재원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포함된다.
②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되었다.
③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2020년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④ 특별교부세는 그 교부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통합·일원화되었다.
⑤ 국고보조금은 지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해설] ①(O). 교부세의 재원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포함된다.

②(X). 가장 최근에 신설된 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이다(2015년 시행). 한편, 부동산교부세는 2006년부터 시행된 교부세이다.

지방교부세 종류	제·개정 시기(시행 시기)	폐지 시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1961(1962)	유지
부동산교부세	2005(2006)	유지
소방안전교부세	2014(2015)	유지
분권교부세	2004(2005)	2014(2015 시행)

③(X).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2020년 100분의 45로 상향 조정되었다.

④(X). 특별교부세의 교부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지방교부세법).

⑤(X).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

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정답] ①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925-926.

3. 다음 사례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은? 2021국회8급

> 지방정부 A시는 최근 일정 나이의 청년들에게 월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청년소득 정책을 실시하였다. 청년소득 지급이 청년들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년소득 정책 실시 전후 대상자들의 고용현황을 측정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를 청년소득의 효과라고 해석하려고 한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경기불황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① 호손효과 ② 검사요인
③ 역사적 요인 ④ 회귀인공요인
⑤ 오염효과

[해설] ①(X). 호손효과는 인위적인 실험환경에서 실험집단이 자신들이 실험 대상자라는 인식 때문에 심리적 긴장감으로 인하여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적 타당도의 저해요인에 해당한다.
②(X). 검사요인(측정요인)은 테스트와 측정 절차가 연구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테스트 문제들이 프로그램 전과 후에 사용된 경우에 주로 나타나며,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에 해당한다.
③(O). 문제 박스 내용 중에서 '경기불황'은 고용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사건으로서, 역사적 요인(사건 요인)에 해당한다. 역사적 요인은 평가실험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실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건을 말한다.
④(X). 회귀인공요인은 실험 직전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평소와는 달리 유별나게 좋거나 나쁜 결과를 받은 사람(극단적인 점수를 받은 사람)이 선발되는 경우, 이들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에 해당한다.
⑤(X). 오염효과(확산효과)에는 누출효과와 모방효과가 있다. 누출효과는 실험처리의 내용이 통제집단에 누출된 경우에 발생하며, 모방효과는 통제집단이 실험집단의 행태를 모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주로 진실험에서 나타나는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이다.

[정답] ③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328-330.

4. 정부 예산에 대한 이론 중 다중합리성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2021국회8급

① 예산 혹은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합리성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사회·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관료들은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
② 예산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이후 다시 합리적 균형을 지속하게 된다.
③ 예산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해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
④ 예산 결정은 전체적인 혹은 종합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일정 규모의 증가에 그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⑤ 관료를 공익을 대변하는 합리적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합리성을 따르는 경제적 주체로 본다.

[해설] ①(O). 다중합리성모형(multiple rationalities model)은 Thumaier & Willoughby(2001)에 의해 제시된 모형으로서, 정부 예산에 대한 과정적 접근에 근거한다. 이 모형은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중합리성 모형에 따르면, 중앙예산기관의 예산분석가들은 각 부처의 업무와 자원 활용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거시적 관점을 갖고 정책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 관료들의 미시적 관점과 정무직 관료의 거시적 관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②(X). ②는 단절균형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단절균형모형(Baumgartner & Jones)은 예산 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단절 현상이 발생한 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이론이다.
③(X). ③은 합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합리모형은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분석한 다음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예산을 배분한다.
④(X). ④는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점증모형은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가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⑤(X). ⑤는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이다. 공공선택론은 관료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합리성을 따르는 경제적 주체로 본다.

[정답] ①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93-700.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5.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행정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2021국회8급

① ICT기술의 발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운영된다.
② 대규모 정보에 대한 분석으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③ 정보의 분석기술의 발달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촉진될 수 있다.
④ 정보의 공개와 유통으로 간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시민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⑤ 행정서비스의 종합적 제공을 위한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가 발달한다.

[해설] ④(X).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분야의 연결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생산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웹에 연결하고 산업과 산업 간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초지능성을 창출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이 활성화될 것이고, 시민의 직접 참여가 용이해지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것이다. 다만, 시민집단중심 서비스와 개인중심의 서비스를 구분할 경우, 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이 활성화될 것이다.

①②⑤(O).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은 빅 데이터(Big Data Statistical Analysi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로봇공학(Robot Engineering),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 IoT), 무인 운송 수단, 3D 프린팅(3D printing), 연결 및 표시 기술 등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ICT기술의 발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운영이 가능해지고, 대규모 정보에 대한 분석으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행정서비스의 종합적 제공을 위한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가 발달할 것이다.

③(O).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의사결정의 집권화가 촉진된다는 시각(Leavitt & Whisler)도 있고, 정보의 분석기술의 발달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촉진된다는 시각(Anshen & Burlingame)도 있다. ③번 지문의 경우 '정보의 분석기술의 발달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촉진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정보분석기술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980-983.

6.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국회8급

① 품위 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③ 육군 소장과 강원도 소방정감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공개의무가 있다.
④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50만원이다.
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경기도 교육장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해설] ①(X). 품위 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분상 의무	직무상 의무		
●선서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대통령 허가 필요 ●품위 유지(직무 내외 불문)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성실 ●친절·공정 ●종교중립 ●복종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퇴직 후에도) ●청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제도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재산공개 대상자의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부패 신고 및 처리 – 내부고발자 보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국민감사청구제도 ●고충민원 조사·처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②(X). 재산등록의무자인 취업심사대상자(6급 및 7급 공무원 중 서비스 종사자 등 일부 제외)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③(X). 육군 중장 이상과 소방정감 이상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공개의무가 있다.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공직자윤리법
공개 의무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교육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협중앙회·수산협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④(X).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대 상	상한액
(1)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40만원
(1)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2)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00만원

⑤(O).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경기도 교육장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구 분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록 의무자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 교육감·교육장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한국은행, 공기업 등) 임원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2급 이상의 군무원 •감사원, 국세청 및 관세청, 부패방지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3급 군무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회계 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회계 담당 공무원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국가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소방위·소방장 제외 가능) •대학의 처장·실장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등

[정답] ⑤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36-648.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7.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국회8급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공기관심의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고, 지방공기업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④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결정되지 아니한다.
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지표로서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혁신과 소통 등이 포함된다.

[해설] ①(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연차별 보고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X).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심의·의결한다.
③(O).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지방공기업법).
④(O).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결정되지는 아니한다.
⑤(O).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평가 범주	주요 평가 내용
경영 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
주요 사업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정답] ②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428-433.

8.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국회8급

① 공공선택론은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개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주의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② 후기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③ 비교행정 연구모형을 제시한 리그스(Riggs)의 연구는 행정 현상을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생태론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④ 신제도론은 외생변수로 다루어져 오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생변수와 같이 직접적인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⑤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의 문제와 행정의 가치문제를 중시한다.

[해설] ①(O).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중시한다. 이로 인해 공공선택론은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개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주의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O). 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 과학적 연구를 중시하고, 후기행태주의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③(O). 비교행정 연구모형을 제시한 리그스(Riggs)의 연구는 행정 현상을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④(O). 신제도론은 정부 활동의 결과, 즉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신제도론은 그동안 외생변수로 다루어졌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생변수로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X).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행정현상에서 중요한 권력, 갈등, 의사전달, 정책결정 등의 문제나 혹은 행정의 가치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⑤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123-159.

9. 광영항정의 방식 중에서 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21국회8급

ㄱ. 사무위탁	ㄴ. 행정협의회	ㄷ. 지방자치단체조합	ㄹ. 연합	ㅁ. 합병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해설] ㄱ.(X).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를 다른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집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은 아니다.
ㄴ.(X).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집행하거나, 그 사무에 대한 연락·조정을 도모하고, 광역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식이다(법인격 없음).
ㄷ.(O).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새로운 법인인 조합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ㄹ.(X). 연합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광역도시권에 새로운 정부 연합을 설치하여, 이 도시연합으로 하여금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ㅁ.(O). 합병은 기존의 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811-814.

10.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와 그 사례의 연결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21국회8급

ㄱ. 책임운영기관 - 국립의료원	ㄴ.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관광공사
ㄷ.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근로복지공단	ㄹ. 시장형 공기업 - 한국철도공사
ㅁ. 정부기업 - 우정사업본부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해설] ㄱ.(△). 국립의료원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책임운영기관이었으나, 2010년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바뀌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 이 문제는 바뀌기 전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된 문제로서 논란이 되나, 현행이라는 표현이 없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문제이다.

구분		책임운영기관
조사 연구형 기관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	국립종자원, 화학물질안전원,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항공기상청
	연구형 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통계개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기상과학원
교육훈련형 기관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통일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문화형 기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방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궁능유적본부
의료형 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 경찰병원
시설관리형 기관		해양경찰정비창, 국방전산정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타 유형의 기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특허청(중앙책임운영기관)

ㄴ.(X). 한국관광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ㄷ.(X). 근로복지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 국립공원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장학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생태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ㄹ.(X). 한국철도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한다.

구 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 준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기 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강원랜드(주)	한국마사회, 한국감정원,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주식회사 에스알 등

ㅁ.(O).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사업을 관장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업(정부부처형태의 공기업)에 속한다.

[정답] ①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427-437.

11.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국회8급

①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에서 모호하고 대립된 기대는 일선관료들의 집행성과에 대한 기대 중 비현실적인거나 상호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② 일선관료는 일반 시민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당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③ 육체적·신체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는 '잠재적 공격자'의 특징을 사전에 정의함으로써 집행현장의 의사결정을 단순화하는 방법이 있다.
④ 일선관료는 시간과 정보·기술적인 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을 하게 된다.
⑤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름길'을 택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정책대상집단과의 갈등이나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피하는 것이다.

[해설] ①(O). 일선행정관료(street-level bureaucrat)란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 즉 교사, 경찰, 복지요원 등을 말한다. 일선행정관료의 업무 환경은 불충분한 자원,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등을 특징으로 한다.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는 일선행정관료들의 업무수행을 목표와 연계시켜서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게 만들며, 비현실적인거나 상호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②(O). 일선행정관료는 일반 시민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당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③(O). 일선행정관료들은 과다한 업무량과 직무의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해 업무의 단순화·정형화·관례화를 꾀한다. 예를 들어 육체적·신체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는 '잠재적 공격자'의 특징을 사전에 정의함으로써 집행현장의 의사결정을 단순화하는 방법이 있다.
④(X). 일선행정관료는 시간과 정보·기술적인 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불충분하다. 자원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은 곤란하다.
⑤(O).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일선행정관료는 고객의 수요를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할당배급 방식, 제한된 고객집단에만 유용한 정보 제공 등)을 취한다.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는 쉬운 방법은 '지름길'을 택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정책대상집단과의 갈등이나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피하는 것이다.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315-316.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12.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2021국회8급

> 톰슨(Thompson)의 이론에 따르면, (ㄱ)의 경우 단위부서들 사이의 과업은 관련성이 거의 없으며 각 부서는 조직의 공동목표에 독립적으로 공헌하게 된다.
> 이러한 (ㄱ)은 주로 중개형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에서 나타나는데 부서들이 과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단위작업 간의 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
> (ㄱ)이 있는 경우 부서 간 의사소통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관리자들은 부서 간 조정을 위해 표준화된 절차와 규칙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① 교호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
②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③ 집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
④ 과업의 상호의존성(task interdependence)
⑤ 공동의 상호의존성(common interdependence)

[해설] ③(O). 중개적 기술과 관련된 상호의존성은 집합적 상호의존성이다. 집합적 상호의존성의 경우, 단위부서들 사이의 과업은 관련성이 거의 없으며, 조직의 공동목표에 독립적으로 공헌하게 된다.

기 술	구조(상호 의존성)	조정 방법	조정 난이도	추가적 방법
중개적 기술	집단적(pooled)	표준화	가장 용이	전담 직위로 참모 설치
길게 연결된 기술	순차적(sequential)	계획	중간	위원회 설치
집약적 기술	교호적(reciprocal)	상호 적응	가장 곤란	project team, task force

[정답] ③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3993.

13.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국회8급

① 업무수행자가 복잡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수행방식을 법규나 지침으로 경직화시키지 않는다.
② 전문성이 강한 전문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업무의 동질성이 높다.
③ 수평적 분화의 정도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의 정도는 낮다.
④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본래 목적이 달성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⑤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협력업체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협력업체들은 하위조직이 아니며 별도의 독립된 조직들이다.

[해설] ②(X). Adhocracy는 다양한 전문적 기술을 가진 비교적 낯선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며, 문제 중심으로 조직된, 변화가 심하고 적응력이 강하며 임시적인 하나의 체제이다(Bennis). 따라서 업무의 동질성이 높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Adhocracy의 대표적인 조직 유형으로 프로젝트 팀(project team), 태스크 포스(task force), 복합조직(matrix organization), 네트워크조직(network organization) 등을 들 수 있다.
①③(O). Adhocracy는 낮은 복잡성, 낮은 공식성, 낮은 집권성을 특징으로 한다. Adhocracy에서는 수평적 분화는 많이 일어나지만, 업무수행은 주로 자율적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직적 분화의 수준은 낮다.
④(O). 태스크포스는 본래 군대 용어로서 기동부대를 의미하였으며, 특별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임시조직으로서, 과업이 완성된 후 해체되는 조직이다.
⑤(O). 네트워크조직은 조직의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기관들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협력업체들은 하위조직이 아니며 별도의 독립된 조직(외부기관)들이다.

[정답] ②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411-420.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14.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국회8급

① 주민발안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임기 만료 1년 미만일 때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은 자신의 권익에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해설] ①(O). 주민발안제도는 주민이 조례의 제·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은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O).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③(O).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④(O).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적인 피해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주민으로서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이라면 가능하다.

⑤(X).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정답] ⑤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57, 822-830.

15.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정책의제설정모형은? 2021국회8급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회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고, 노력하도록 자극을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① 동원형 정책의제 설정
② 내부접근형 정책의제 설정
③ 외부주도형 정책의제 설정
④ 굳히기형 정책의제 설정
⑤ 대중인식형 정책의제 설정

[해설] ①(O). 동원형 정책의제 설정은 외부주도형과는 정반대로 정책 담당자[정부 내의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하는 경우이다. 카리스마적 지도자 하에서 또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동원형 정책의제 설정 사례로 새마을운동, 가족계획사업, 경부고속도로 건설, 서울시 지하철 건설, 사회정화운동, 올림픽 및 월드컵 유치, 제2건국운동, 전자주민카드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미국 Johnson 대통령의 빈곤퇴치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①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233-234.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16.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국회8급

① 정부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O).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O).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X).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 정리 기한(출납 자체를 인정하는 기한, 한국은행 포함)	회계연도 12월 31일
출납 기한(총세입부와 총세출부의 마감까지)	다음 연도 2월 10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에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이 검사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정부(기획재정부장관)가 국회에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의 결산심의 완료	다음 연도 정기회 개회 전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85, 732-734.

17.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21국회8급

ㄱ. 공무원이 반응해야 하는 대상을 고객과 유권자 집단으로 본다.
ㄴ. 책임성 확보의 방법으로 개인이익의 총합을 통해 시민 또는 고객집단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ㄷ. 행정재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ㄹ. 공익의 개념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ㅁ. 공무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수단은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와 사회봉사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해설] ㄱ.(X). 공무원이 반응해야 하는 대상을 고객과 유권자 집단으로 보는 것은 전통적 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공무원이 반응해야 하는 대상을 시민으로 본다.
ㄴ.(X). 개인이익의 총합을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본다.
ㅁ.(X). 공무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수단으로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를 중시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를 중시한다.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관 점	전통적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론과 인식의 토대	초기의 사회과학	경제이론, 실증주의	민주주의, 실증주의·현상학·비판이론·신행정론·포스트모더니즘 포괄
합리성과 행태모형	개괄적 합리성, 행정인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인간관	전략적·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접근
공 익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개인들의 총이익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관료 반응 대상	고객과 유권자	고객	시민
정부의 역할	노젓기(정치적으로 결정된 단일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입안과 집행)	방향잡기(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봉사(시민과 지역공동체 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하여 공유가치의 창출)
정책목표의 달성기제	기존의 정부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체제를 창출	동의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개인들의 연합체 구축
책임에 대한 접근 양식	계층제적 – 행정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에게 반응	시장 지향적	다면적 – 법, 지역공동체 가치, 정치 규범, 전문적 기준 및 시민들의 이익에 기여
행정재량	관료에게 제한된 재량만 인정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넓은 재량 허용	재량을 부여하지만 책임을 수반
기대하는 조직구조	상명하복의 관료적 조직과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	기본적 통제를 수행하는 분권화된 공조직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
관료의 동기유발	임금과 편익, 공무원 보호	기업가 정신, 정부 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	공공서비스,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

[정답] ②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172-173.

18.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국회8급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이 정부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이 발의되기도 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같은 법률내의 조항 간 모순·충돌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는 체계심사는 표결을 통과한 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①(O). 법제처장은 매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법령안 별로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O).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페이고(pay-go)]. 그러나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이 정부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③(O).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④(X).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내온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하기 전에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한다. 이 때 '체계심사'라 함은 법률안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균형유지, 자체 조항 간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하며 동시에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이다. 또 '자구의 심사'라 함은 법규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상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문언의 정비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⑤(O).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71, 720.

19. <보기>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2021국회8급

ㄱ. 공모직위는 공무원에게만 개방하며 민간인은 지원할 수 없다.
ㄴ. 개방형직위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직 및 별정직은 제외된다.
ㄷ.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개방형직위 지정범위에 관해 중앙인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ㄹ.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해설] ㄱ.(O).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외 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로서 민간인이 지원할 수 있으나, 공모직위는 공직 내에서 기관 내외의 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에게만 개방하며 민간인은 지원할 수 없다.

ㄴ.(X). 일반직·특정직·별정직·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나 과장급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다(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ㄷ.(X).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개방형직위 지정범위에 관해 중앙인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ㄹ.(O).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ㅁ.(X).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③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548, 558.

20.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국회8급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의 경우, 정책집행자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정책집행자가 정책목표를 지지하지 않을 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②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관리적 행위에 관한 권한들을 정책집행자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정책집행자는 행정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③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은 정책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수의 집행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협상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정책결정자와 협상을 하게 되고, 만약 정책집행자들이 정책결정자가 제시한 정책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응 또는 불집행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관료적 기업가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

[해설] ⑤(X).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하는 것은 재량적 실험형에 대한 설명이다. 관료적 기업가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유 형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자	집행실패요인	평가 기준
고전적 기술자형	명백한 목표설정	기술적 권한 행사	기술적 실패	효과성+능률성
지시적 위임형	구체적인 목표 설정	행정적 권한 행사, 집행자 상호 간 협상	+협상의 실패	능률성+효과성
협상형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제시하나, 정책집행자가 목표의 바람직성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지는 않는다. 목표와 수단에 대해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가 협상한다.		+흡수 내지 사술(詐術)	주민만족도
재량적 실험형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 지지	목표와 수단의 재정의	+무책임성	수익자 대응성
관료적 기업가형	정책집행자가 형성한 목표와 수단에 대해 정책결정자는 지지한다.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흥정)한다.	+정책의 선매 (先買, preemption)	체제유지도

[정답] ⑤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313-314.

21. 우리나라 중앙예산부서의 재정관리 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국회8급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자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지능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②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③ 예산 절감이나 국가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제공하는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④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설] ①(O). 기획재정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X).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주무관청(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③(O).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④(O).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 및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 사업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총사업비 관리제도).
⑤(O).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를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이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2006년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에 설치되었으며, 이후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정답] ②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777-780.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22. 혼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21국회8급

ㄱ. 혼돈이론은 안정된 운동상태를 보이는 계(系)가 어떻게 혼돈상태로 바뀌는가를 설명하고, 또 혼돈상태에서 숨겨진 질서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ㄴ. 혼돈이론에 의하면, 혼돈은 스스로 불규칙하게 변화할 뿐 아니라 미세한 초기조건의 차이가 점차 증폭되어 시간이 얼마간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ㄷ. 혼돈이론은 선형적 변화를 가정하며, 이는 뉴턴(Newton)의 운동법칙을 계승한 것이다.
ㄹ. 혼돈이론에서 설명하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과정은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와 공진화(coevolution)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ㄱ.(O). 혼돈이론(카오스이론, chaos theory)은 혼돈 상태(chaos)를 연구하여 폭넓고 장기적인 변동의 경로와 양태를 찾아보려는 접근 방법이다. 혼돈이론은 안정된 운동상태를 보이는 계(系)가 어떻게 혼돈상태로 바뀌는가를 설명하고, 또 혼돈상태에서 숨겨진 질서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ㄴ. (O). 혼돈이론에 의하면, 혼돈은 스스로 불규칙하게 변화할 뿐 아니라 미세한 초기조건의 차이가 점차 증폭되어 시간이 얼마간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초기치 민감성(初期値 敏感性)].
ㄷ.(X). 뉴턴(Newton)의 운동법칙은 현상의 선형적 변화를 가정한다. 이에 반해 혼돈이론은 비선형적·역동적 체제에서의 불규칙적인 측면을 연구한다.
ㄹ.(O). 혼돈이론에서 설명하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과정은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와 공진화(coevolution)이다. 자기조직화는 외부의 간섭 없이 구성요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질서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진다는 법칙으로 복잡적응체제에 작용하는 보편적 법칙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진화는 공진화는 상호 의존하는 종들이 함께 진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방은 박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청각세포의 민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했고, 박쥐는 이에 대응해서 초음파를 다양한 형태로 발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정답] ③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174, 1031-1033.

2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21국회8급

ㄱ.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종단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나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한 제도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ㄴ. 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는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다가 외부의 충격을 겪으면서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경로에서 다시 균형상태를 이루는 단절적 균형의 특성을 보인다.
ㄷ.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조되고,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규칙 또는 규범에 적절하게 순응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ㄹ.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에서 개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없으며 제도에 종속될 뿐이라고 본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ㄱ.(X). 역사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종단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나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한 제도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ㄴ.(O).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단절적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는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다가 외부의 충격을 겪으면서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경로에서 다시 균형상태를 이루는 단절적 균형의 특성을 보인다.
ㄷ.(O).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조되고,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규칙 또는 규범에 적절하게 순응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ㄹ.(O).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이 어떤 제도적 양태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은 조직이 기반을 두고 있는 환경적 상황, 즉 제도의 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에서 개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없으며 제도에 종속될 뿐이라고 본다.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152-159.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24. 우리나라 예산집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21국회8급

ㄱ.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다. ㄴ. 계속비는 사전승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원칙적으로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이내이다. ㄷ.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ㄹ.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차관, 국공채 등이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ㄱ.(O).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총액을 정해주고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다.

ㄴ.(X).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비는 사전승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5년 이내(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 가능)에서는 허용된 경비 총액 범위에서 계속지출이 가능하며,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계속비사업 완성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다[계속비의 체차이월(遞次移越)].

ㄷ.(O).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ㄹ.(X).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하여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로 하여금 다음 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ㄹ.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차관, 국공채 등이 포함된다."라는 표현에 대한 검토

⑴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2) 신해룡(2005), 「예산정책론」, pp.91-95.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차입금의 비교>

① 국회의 의결형태는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차입금으로 구분된다.
②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나 차입금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이 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연도에 현금의 유입이 없으나 차입금은 차입을 통한 현금 유입이 있다.

(3) 결론

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금전채무에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포함되나,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구분된다.
② 신해룡의 설명에 따르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채권이나 차입금과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③ 따라서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차관, 국공채 등이 포함된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정답] ②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72, 730. 핵심체크, pp.301, 330.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25. 정부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국회8급

① 관리규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의 선택은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가 많은 자율성을 갖는다.
②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투입규제라고도 한다.
③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④ 자율규제는 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이다.
⑤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이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해설] ①(X). ①은 성과규제에 대한 설명이다. 성과규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의 선택은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가 많은 자율성을 갖는다. 한편, 관리규제는 수단이나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는 피규제자가 만든 규제목표 달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③④(O). 직접규제는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고, 자율규제는 자율규제는 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한편,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로서, 직접규제와 자율규제의 중간 상태이다.

⑤(O).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 할 수 없다' 혹은 '~가 아니다'의 형식을 띤다(대기업이 할 수 없는 사업 : 프랜차이즈 사업).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정답] ①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74-75.